

# 광주·전남 올 여름 더 덥고 7월 집중 호우 예상

## 광주기상청, 6~8월 날씨 전망

올해 여름에도 광주·전남은 찜찜 끓는 무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가능성이 높아 7월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6~8월) 날씨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오는 6~8월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8월 내내 평년 기온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40%로 내다봤다.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의 6~8월 평균기온은 각각 22도, 25.6도, 26.6도였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 40%... 폭염·열대야도 자주 발생 엘니뇨 현상에 7월 많은 비...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보는 근거로 ▲북태평양 10년 주기 진동(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0년 이상 주기로 평년보다 높거나 낮을 상태로 지속되는 패턴)상 중심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 점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점 등을 꼽았다.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오는 7월까지 남인도양과 필리핀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동인도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

년보다 차가울 경우에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는 대류가 활발해지며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

또 지난 4월 서아시아 지역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다는 점도 여름철 높은 기온을 전망하는 이유다. 서아시아 지역의 적은 눈덮임에 의한 복사 효과 가 열대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에너지를 전파하는 대기 파동을 일으켜 더운 기온이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무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과 열대야도 잦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염은 하루 최

고 기온인 33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광주시의 평년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11일 보다 5일 많은 16일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열대야도 최근 10년간 평균 15.7일에 달했다.

지구 온난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10년 광주·전남 여름철 평균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았다.

다만 기상청은 6월과 7월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무더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7월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에다가 서고 있어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겹쳐지고 7월에 몰린다는 전망이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볼때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4월부터 상승하고 있어 5~7월 사이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6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7월에 강수량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 6~8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599.5mm로 평년(587.5~816.2mm)과 비슷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패턴이 발생할 수 있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압계 변화가 클 수 있다"며 "매일 발표되는 3개월 전망과 매주 발표되는 1개월 전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din.com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강제징용 배상금 일부 지급 약정은 공익 목적”

시민모임, 중앙 언론사 기사에 반박 “윤 정부 국면 전환용인 듯”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지급 받기로 약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년 전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해당 기사에 대해 단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송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체결됐다.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

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게 교부할 것 ▲수임인들(변호인단)이 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뒤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할 것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이 약정 자체는 소송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승소조차 가능할지 모를 때 맺은 것으로 원고들처럼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맺어진 것 뿐”이라며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이 지났지만 판결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거나 배상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모임은 “약정 내용이 왜 문제가 되고 불온한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국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특전사동지회 5·18 참배 반대”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단체위원회가 23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를 반대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에게 ‘대국민 공동선언문’ 폐기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고흥군 교통 통제

외나로도 등 육·해·공 출입 전면 통제... 인근에 임시 주차장 마련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인 24일 발사 현장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육지와 해안에서 각종 통제가 실시된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부터 발사 종료시까지 관람객이 몰리는 인근 전방대 등에서 차량을 집중 통제한다.

고흥군은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더해 2954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방대 주차장(104면), 남열해수욕장 주차장(250면), 남열초

주차장(100면) 등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장이 가득 차면 인근 이면도로 임시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남열마을-남열해수욕장(1km), 남열해수욕장-전방대(1.4km), 전방대-용암마을 삼거리(2km) 등 4.4km에 달하는 이면도로 구간에 차량 250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주차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량 1대당 1.5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가 가능하다. 고흥군은 동이면 봉남당대도 오전 11시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이

걸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한편 발사 당일 발사대가 있는 외나로도도 포함해 인근 도로, 해상, 공중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돼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금지한다.

발사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변에서는 갯바위 낚시도 할 수 없다. 발사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개선하라”

인권위, 광주교육청에 권고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광주시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주관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가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화장실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며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응시자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인권침해를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